

한국 시장경제의 특질: 지경학적 조건과 사회·문화의 토대에서⁽¹⁾

이 영 훈

1. 머리말

나라마다 시장경제는 제 나름의 유형을 지닌다. 한국의 시장경제도 마찬가지다. 이 글은 우선 한국 시장경제의 유형을 대변한다고 여겨지는 몇 가지 정형화된 사실을 소개할 것이다. 상호 긴밀히 연관된 그것들은 역사적으로 형성되었다. 그 역사적 환경이나 토대와 관련하여 이 글은 다음의 두 가지에 주목할 것이다. 하나는 한국을 둘러싼,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지역경제의 구조이다. 곧 한국경제의 지경학적(geo-economic) 조건이다. 다른 하나는 이른바 ‘비공식적 제도’로서 한국의 사회와 문화가 지니는 특질이다. 아마 이 글은 한국의 시장경제와 비공식적 제도의 상관을 추구한 최초의 시도일 것이다. 그런 만큼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1) 이 글의 초고는 2014년 12월 16일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가 개최한 학술대회 ‘21세기 한국 자본주의 대논쟁’에서 보고되었다. 이후 논문이 완성되어 『제도와 경제』 제9권 1호(2015. 2)에 게재되었다. 이 글은 경제연구소가 위 학술대회에서의 보고와 토론을 『경제논집』의 특집으로 편집, 게재할 의도에 부응하여 이미 출간된 논문을 요약한 것이다. 이에 세밀한 주석은 달지 않는다. 이 글이 언급하는 각종 통계나 문헌에 대해서는 『제도와 경제』에 게재된 논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란다.

2. 몇 가지 정형화된 사실

2.1. 높은 수준의 개방경제

널리 알려진 대로 1963년부터 개시된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은 수출 증대를 원동력으로 하였다. 1965년 한국경제의 대외개방도(수출입/GNI)는 25.5%였다. 그것이 1996년에는 60.1%로, 2011년에는 113.5%라는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 한국경제는 저성장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런 가운데 한국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한 것은 급속히 증대한 수출입 무역이었다. 세계은행에 의하면, 2012년 한국경제는 GDP가 1조 달러(USD, 경상가격) 이상인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대외개방도를 보였다.

수출의 주도력은 소수의 대기업이다.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은 1970년대에는 35%, 1990년대에는 42% 전후라는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2001년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은 이전 36년간에서 가장 높은 42.9%를 기록하였다. 이후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은 급하게 감소하였으며, 2013년에는 이전 44년간에서 가장 낮은 17.3%로 내려앉았다.

2.2. 국가경제의 중핵으로서 대규모 기업집단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규모 기업집단은 63개이며, 그에 소속된 기업은 1,831개이다. 2012년 한국의 상위 200개 대기업 가운데 171개가 이들 63개 기업집단에 속해 있다. 대규모 기업집단은 한국경제가 보유한 국제경쟁력의 중핵을 이룬다. 한국의 기업이 미국에서 취득한 특허는 1981년 17개에서 2010년 11,671개로 급증하였다. 2010년 한국은 미국특허 기준으로 미국, 일본, 독일 다음의 기술 강국이 되었다. 그런데 그 미국특허의 거의 60%는 최대 5대 기업에 의해 출원되었다.

대규모 기업집단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추세에 관해서는 상이한 해석이 대립하고 있다. 기업집단은 시장경제가 불완전한 여러 후진국에서, 동유럽의 체제 이행국가들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존재이다. 나아가 기업집단은 스웨덴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역할을 바꾸면서 오래 전부터 존속해 오고 있다. 대규모 기업집단의 시장지배력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다는 비판에도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 상위 20대 기업의 매출집중도에서 한국은 미국, 일본, 대만보다는 높지만, 영국, 독일과는 비슷한 수준이고, 프랑스와 스웨덴보다는 낮다.

대외개방도가 높은 나라에서 대기업의 매출집중도는 일반적으로 높다. 대기업 매출의 상당 부분을 점하는 해외시장의 규모에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2011년 한국의 30대 기업집단이 점하는 비금융업에서의 매출집중도는 38.9%이다. 대기업 매출의 절반 이상이 해외시장에서 이루어짐을 감안하여 수출을 제외한 30대 기업집단의 국내 매출집중도를 계산하면 28.9%로 낮아진다.

2.3. 영세사업체의 과밀과 적체

1993~2012년 전 산업의 사업체 분포에서 두드러진 변화는 1~9명의 영세사업체 수가 214만에서 332만으로, 동 종사자 수가 477만에서 763만으로 팽창했다는 사실이다. 대조적으로 1,000명 이상의 대기업 수는 605에서 543으로, 종사자 수는 151만에서 120만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제조업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제조업에서 종사자 300명 이상의 대기업 수는 1,223에서 687로, 종사자 수는 133만에서 72만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1~9명의 영세사업체 수는 22만 6,000에서 29만 6,000으로, 종사자 수는 72만에서 92만으로 증가하였다.

제조업에서 대기업 수가 주는 현상은 1989년부터이다. 1960~1989년에 걸쳐 제조업에서 종사자 500명 이상, 200~499명, 50~199명의 사업체 수는 증가일로였다. 500명 이상의 대규모 업체가 1976년까지 가파르게 증가하고, 200~499명과 50~199명의 사업체가 그 뒤를 따랐다. 1989년을 넘기면서 상위 세 구간의 제조업체 수는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대조적으로 종사자 5~9명과 10~49명의 하위 두 구간의 제조업체 수가 급하게 증가하였다.

1989년을 전후하여 제조업에서 대규모 기업이 줄고 영세 소기업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믿을만한 연구가 보이지 않는다. 1987년 이후 기업이 대량의 노동자를 고용함에 따른 정치적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가설은 검증되지 않았다. 각종 규제 강화가 대기업의 사업장 축소나 분산을 통한 중소기업화를 촉진했다는 가설 역시 검증되지 않았다. 대기업의 주력 업종이 노동절약적인 IT산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기술 요인의 가설도 설득력이 커 보이지 않는다. 같은 변화가 있는 다른 나라에서 대기업의 비중은 감소하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영세 소기업의 증가가 대기업과의 역압적 수급관계 때문이라는 가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급관계가 1990년대 이후 감소하는 추세였음을 고려하면 성립하기 힘들어 보인다. 정부의 과도한 자금 지원이 영세 소기업의 증가를 부추겼다는 가설도 영세

소기업의 부채비율이 꾸준히 개선되어 왔기 때문에 유의하지 않다.

어쨌든 잘 알지 못하는 요인들의 복합적 작용에 의해 1989년 이후 대규모 기업의 비중이 줄고, 영세 소기업의 비중이 늘었다. 그 결과 오늘날 한국경제는 국제적 비교에서 영세 제조업체가 과밀하다는 특징을 안고 있다. 제조업만이 아니라 전 산업에서 그러하다. 서비스업에서 자영업자로 불리는 영세사업체의 종사자 비중을 1인당 GDP를 기준으로 비교할 때, 한국은 그리스, 터키, 멕시코, 이탈리아와 함께 자영업이 비대한 그룹을 이루고 있다.

2.4. 노동시장의 심한 불안정과 불균형

노동시장의 질을 나타내는 여러 지표에서 한국은 OECD에서 최고 아니면 최저의 극단을 보인다. 2009년 정규직의 근속연수는 평균 6.2년인데, 이는 OECD에서 가장 짧은 편이다. 비정규직이나 기간제의 근속연수는 2년이 채 되지 않는다. 나아가 전체 피용자 가운데 1년 미만 근속자의 비율은 36.2%나 되어 단연 최고다. 반면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비중은 16.9%로 최저다.

노동시장의 실태가 이렇게 열악한 것은 영세사업체의 과밀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영세사업체는 비정규직과 저임금의 온상이다. 2011년 종사자 1~4명의 영세사업체에서 비정규직은 82.5%이다. 그에 비해 300명 이상의 대기업에서 비정규직은 16.5%에 불과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임금 수준에서도 현격한 격차를 보인다. 2009년 종사자 300명 이상 대기업의 시간당 임금을 100으로 할 때, 30~99명은 51.2, 10~29명은 48.7, 5~9명은 46.0에 불과하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커다란 격차를 내포하는 분절성을 특징으로 한다.

뒤이어 지적할 점은 인력 수급의 불균형이 심하다는 사실이다. 2006년 15~64세의 고용률은 64%로서 OECD 평균 66%보다 낮다. 특히 24세 이하 청년층의 고용률이 미국, 영국, 독일, 일본보다 14~30% 포인트나 낮다. 이는 청년층 생산가능인구의 절반 이상이 비경제활동인구로서 통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린다. 부족한 인력의 상당 부분은 외국인근로자로 충당된다. 인력 수급의 불균형은 1990년대 이후의 교육정책의 혼란에 원인이 있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숙련과 기술을 기업 외부에서 충원하는 외부노동시장이다. 노동시장의 불안정과 불균형이 심하여 근로자의 숙련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숙련과 비숙련의 골은 그리 깊지 않아 대개 단기간의 근속으로 메워질 수 있다. 대부분

의 기업은 근로자의 숙련 형성에 투자하지 않는다. 그로 인해 한국 근로자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예컨대 전 산업 근로자의 1인당 생산성은 미국의 약 60%에 불과하다.

3. 지경학적 조건: 조립형 공업화

한국의 몇몇 공업과 대기업은 2차 세계대전 후 공업화에 착수한 후발국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선발국의 경쟁 상대를 추격하는 데 성공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의 대기업은 전자, 철강,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에 대규모 투자를 감행했으며, 1990년대에 걸쳐 선발국의 경쟁 상대와 비슷한 기술력을 확보했으며, 2000년대에 이르러 시장점유율에서 그들을 추격하였다. 성공적 추격의 비밀은 기술수명이 짧은 신산업에서 뛰어들어 선발국과 상이한 혁신경로를 개척한 데 있었다.

몇몇 공업과 대기업의 성공담에 현혹되어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을 뒷받침한 지경학적 조건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해서는 곤란하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 그 자체가 인류사상 전례 없는 고도성장을 구가하였다. 세계무역에서 나타난 새로운 동향은 선진국이 후진국으로부터 노동집약적 공산품을 수입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 시장은 1950년대까지 일본에 의해 거의 독점되었다. 그것이 1960년대 초반에 한국으로 건너오기 시작하였다. 1956년 중화학공업화에 착수한 뒤 고도성장에 접어든 일본 경제는 노동집약적 경공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1963년 한국경제가 갑자기 공산품 수출을 크게 늘린 것은, 이후 공산품 수출을 원동력으로 하여 고도성장에 진입한 것은 이 같은 지경학적 조건에 의해서였다.

기회가 제공되자 한국경제는 민활하게 대응하였다. 한국경제는 수출에 필요한 원자재, 중간재, 부품, 기계, 장치를 주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였다. 공업화의 기본 패턴은 ‘조립형’이었다. 다시 말해 한국의 고도성장에는 고급숙련과 원천기술의 자급적 축적으로 핵심 원자재, 정밀 부품, 고급 기계를 생산하는 공업대국 일본이 인접국이었다는 지경학적 조건이 큰 이점으로 작용하였다.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가 이룩한 성공적 추격에도 불구하고 조립형 공업화의 특징은 오히려 강화되었다. 1991년 총수입에서 수출용의 비중은 30.3%인데, 2000년까지 45%로 높아졌으며, 2012년에도 39.1%의 높은 수준이었다.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 비중은 1991년의 19%에서 2012년의 28%까지 증가하였다. 수출용 자본재의 수입 비

중은 1991년의 9.8%에서 2000년 17.1%의 정점에 달한 뒤, 2012년까지 10.6%로 감소하였다. 2001년 이후 수출용 자본재의 수입 비중이 감소한 것을 두고 자본재의 자급도가 높아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자본재의 수입 자체가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수출용 자본재의 수입 비중이 감소한 것은 아마도 저성장기의 투자 부진 때문일 것이다.

조립형 공업화의 특질은 낮은 수준의 수출부가가치율에서도 확인된다. 2013년 한국의 수출부가가치율은 59.4%로서 OECD 34개국 가운데 31위이다. 무역수지의 구조에서도 조립형 공업화의 특질을 발견할 수 있다.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는 것은 1985~1989년을 제외하면 1998년부터이다. 1997년까지 무역수지의 적자는 거의 대부분 대일본 적자였다. 1998년 이후 무역수지는 대규모 흑자로 돌아서지만 대일본 적자는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원자재와 자본재의 도입선은 중국, 홍콩, 동남아 국가로 다변화했지만, 핵심 부품, 기계, 장치를 일본에서 수입하는 관계는 오히려 심화하였다.

앞서 열거한, 한국 시장경제의 특질을 대변하는 몇 가지 정형화된 사실은 상당 부분 조립형 공업화의 논리로 해명될 수 있다. 노동시장이 외부노동시장인 것은 기업들이 고급의 부품과 기계를 손쉽게 이웃나라에서 수입하였던 지경학적 조건에 기인하고 있다.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의 시기별 추이도 조립형 공업화의 시기별 전개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1989년까지 종사자 500명 이상의 대기업을 필두로 하여 50명 이상의 기업이 증가한 것은 그 때까지가 단순조립의 단계였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노동집약적 경공업에서, 나아가 노동집약적 중화학공업에서 생산설비를 확장함에 있어서 기술, 노동, 시장의 애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대기업을 노동자를 대거 모집하자 1976년까지 종사자 50명 이하의 영세 소기업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1970년대까지는 노동집약적 조립이었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수급관계는 정체하였다. 1970년대에 걸쳐 수급업체의 비율은 20% 전후에 머물렀다. 이후 동 비율은 1990년까지 70.1%로 급속히 높아졌다. 대기업의 주력 업종이 우회도가 높은 중화학공업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이다. 1989년까지 종사자 50명 이상의 중소기업 수가 증가한 주요 원인을 이 같은 수급업체의 성장에서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단순조립의 기간에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동반성장을 구가하였다.

이후 수급업체의 비율이 2010년의 43.3%로까지 낮아진 것은 그 기간에 조립형의 패턴이 단순조립이 첨단조립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기술개발은 기업연

구소에서 행하는 급진적인 설계와 실험에 의하였다. 새로운 기술이 요구하는 첨단 부품, 기계, 장치는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졌다. 수급업체는 그 비율이 감소했을 뿐 아니라, 절대 수에서도 감소하였다. 수급업체의 수는 2006년의 65,740에서 2010년의 47,815로 감소하였다.

대기업과의 수급관계가 약해짐에도 불구하고, 앞서 소개했듯이, 종사자 50명 이하의 영세사업체가 제조업에서, 나아가 전 산업에서 비정상적으로 과밀해진 것은 무엇 때문일까. 국제경쟁력을 결여한, 수출산업과 무관한, 대기업과는 더욱 소원해진, 영세사업체가 오로지 좁은 국내시장을 무대로 과밀하게 생겨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관점이 필요하다. 곧 사회와 문화의 역사적 특질이다.

4. 사회와 문화의 토대: 저신뢰, 물질주의, 관료제

주류 경제학의 인습적 사고방식과 달리 경제는 정치, 사회, 문화와 함께 어우러지는 총과정이다. 비용과 편익의 분석에서 도출된 경제적 인센티브나 그것을 보장하는 공식적 제도만으로는 인간들의 선택 행위를 다 설명할 수 없다. 신제도경제학은 반복게임의 전략적 균형이라는 틀로 이를 해명하고 있다. 게임의 반복성과 지속성, 그에 대한 개별 경기자의 믿음은 어떤 외적인 인지적 원천에 의존한다. 그것은 법, 도덕, 단체, 종교와 같은 것들로서 곧 공식적 및 비공식적 제도의 총체이다.

영세사업체의 과밀과 적체라는 한국경제의 정형화된 특질은 한국에서 동업의 기회나 사례가 빈약한 현실과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 1991년 제조업을 포함한 전 산업에서 사업체 총수는 211만이다. 그 중에 개인사업체는 196만으로서 92.7%이다. 회사법인은 총 85,487인데, 주식회사가 81,418로서 95.2%의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나머지 4.8%가 합명·합자·유한회사로서 동업 관계의 회사들이다. 1990년 독일의 사업체 총수는 210만이다. 그 중에 개인사업체는 154만으로서 73.4%이다. 회사법인은 총 523,571인데, 합명·합자·유한회사가 거의 전부인 99.7%이다.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및 주식합자회사’로 보고되는데, 고작 1,717로서 0.3%에 불과하다. 요컨대 독일에 비해 한국에서는 사업체가 법인으로 조직되는 정도가 낮은 가운데, 법인이라 해도 천편일률로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좀 더 세밀히 살펴야겠지만, 한국의 주식회사는 1인 지배의 구조가 대부분이다. 대조적으로 독일에서 주식회사는 소수 대기업에 한하는 예외적 형태인 가운데, 대부분의 회사 조직은 동업 관계로 영위되고

있다.

두 나라의 사업체 형태에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시장 게임의 균형해를 규정하는 공식적, 비공식적 제도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인간들이 서로 믿고, 의지하고, 협동하는 사회의 짜임새, 그 원리가 다른 것이다. 한국인들의 통설적 이해와 달리 한국의 전통사회는 공동체로 조직된 신뢰사회가 아니었다. 17~19세기 전통 사회의 짜임새는 양반-상민-천민 간의 신분 차별을 기본 원리로 하였다. 불만한 공동체는 양반신분의 친족집단에 한하였다. 신분적 멸시와 예속을 면하기 위한 인간들의 사회적 전략과 지향은 친족집단의 결성을 통한 양반화였다. 20세기에 들어서도 사회·문화의 비공식 영역에서 이어진 신분 차별과 그에 제약된 인간들의 행동전략은 1970년대까지 크게 변하지 않았다. 1950~1960년대의 한국사회는 공동체를 결여한, 인간들의 상호 관계는 주로 국가권력과의 관계로 규정되는, 고독한 개인들로 구성된 대중사회였다.

이 저신뢰의 사회에서 인간들이 자기와 가족의 사회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 추구한 가장 확실한 통로는 교육이었다. “조선왕조의 성균관과 과거가 수행한 관료의 선발과 훈련의 기능은 오늘날 약간의 현대적 옷을 입은 채 국립 서울대학교에서 재현되고 있다.” 일류대학을 졸업하고 각종 국가고시에 합격하는 것은 조선왕조의 과거에 급제하는 것과 진배없는 개인과 가문의 영광이다. 그 다음의 위계는 재벌 대기업에의 취직이다. 이렇게 현대 한국사회는 위에서 아래까지 열어져 가는 국가적 위신으로 통합된, 사실상의 관료제적 위계로 편성된 구조이다.

고도성장기에 걸쳐 이 사회를 역사적으로 통합해 온 국가적 위신과 관료제적 위계는 약화되지 않았다. 오히려 고도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하면서 사회의 저변으로까지 침투하였다. 고도성장기의 한국사회는, 격렬한 정치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의 신뢰를 구현하였다. 정부, 기업가, 노동자의 상호관계는 이념을 공유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호혜와 협동의 미덕으로 통합되었다.

고도성장기의 권위주의 정치를 해체한 1987~1989년의 ‘노동자 대투쟁’은 어떻게 평가되어야 좋을까. 3년 동안 무려 7,238건에 196만의 노동자가 참가한 노동쟁의가 폭발하였다. 노동자의 업종별, 지역적, 전국적 연대도 발전하였다. 그 배경에는 오랫동안 “자본주의 부정과 사회주의 건설”을 꿈꾸어 온 노동운동가들의 열정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후의 노동운동은 그들의 기대를 배반하였다. 대투쟁을 주도한 대기업과 서비스업 공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들의 지위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동운

동에 참여하였을 뿐이다. 결국 ‘노동자 대투쟁’은 그 때까지 “자본가들에 대해 억눌렸던 울분을 배설하는 감정적 표상”이었을 뿐이다. 전국을 휘감은 ‘한풀이’의 소용돌이가 지나간 뒤, 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들이 이전과 달라진 신분적 지위에 도달해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 만족감은 그들과 동류로 섞일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신분적 우월감이기도 하였다.

기업 간의 수급관계에 대해 마찬가지로 시각에서 몇 가지 특징을 지적할 수 있다. 1975년 정부는 계열화촉진법을 제정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증진하고자 했다. 정부는 일본의 하도급 관계를 모델로 삼았다. 그렇지만 결과는 실패작이었다. 일본에서와 같은 기업 간 신뢰와 협력의 전통은 존재하지 않았다. 대기업은 하도급 중소기업을 종속기업으로 간주하였으며, 중소기업의 기술과 품질을 신뢰하지 않았다. 중소기업 역시 대기업을 신뢰하지 않았으며, 대기업과의 장기간 고정거래가 그를 종속시킬 위험성을 처음부터 경계하였다. 계열화촉진법이 요구한 공동사업계획서는 형식에 불과했으며, 계열기업협회의 활동은 미미하였다. 당연하게도 정부의 규제는 강화되었다. 1975년 법률이 금지한 대기업의 부당행위는 6가지였는데, 1993년까지 5차례의 개정에서 11가지로 늘었다.

다른 산업·기업정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정부규제는 관료들의 선호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에 역사적으로 배태한 요인에 의해 초래되고 강화되었다. 전경련에 따르면 정부에 등록된 각종 규제는 2000년 6,912개에서 2013년 6월 15,007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2014년 OECD가 발표한 상품시장규제지표에서 한국은 조사대상 OECD 국가 가운데 4위이다. 한국보다 규제 수준이 높은 나라는 터키, 이스라엘, 멕시코의 세 나라이다. 한국 다음은 슬로베니아, 그리스, 폴란드의 순서이다. 비회원국으로서 규제가 가장 강한 나라는 중국, 브라질,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다. 크게 보아 한국은 이들 10개 국가와 경제체제의 질을 같이 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체제는 ‘국가관리 시장경제’이다.

5. 맺는말

한국경제는 고도의 개방체제이며, 소수 대규모 기업집단이 국가경제의 중핵을 점하고 있다. 그 대척점에 수출 및 대기업과 무관한 영세사업체가 과밀하게 적체해 있다. 노동시장은 고용의 질이 열악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분절성이 강하며, 숙

련을 기업 외부에서 구하는 특질을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가 드러내는 이 같은 정형화된 사실의 상당 부분은 고도성장기 이래 주요 소재, 부품, 기계를 대일본 수입에 의존해 왔다는 지경학적 조건에 기인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한국경제의 특질은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사회·문화의 특질과 깊숙이 조응하고 있다. 한국의 전통사회는 관료제적 위계로 통합된, 저신뢰의 물질주의 사회였다. 사회·문화의 그러한 특질은 권위주의정치에 의해 고도성장의 동력으로 동원되었지만, 이후 이른바 ‘민주화시대’를 맞아 한국경제의 선진화를 저지하는 ‘역사의 굴레’로 작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경제가 정형화된 사실로 드러내는 특질 한 가지를 추가한다. 그것은 한국의 경제학자를 포함한 지식인 사회는 그들의 경제체제를 형성해 온 역사에 대해 아무 것도 알지 못하며, 나아가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이다. 한국경제는 그에 마땅한 역사인식으로 뒷받침되어 있지 않다. 그에 따른 부작용은 의외로 심각하다. 대외개방도가 100%를 넘는다고 해서 이 나라를 네덜란드, 벨기에와 같은 고도로 개방된 정신문화의 나라로 간주하면 큰 오해이다. 이 나라가 뿜어내는 민족주의의 독소는 국제적으로 특이한 수준이다.

한국경제가 그에 상응하는 정신문화로 뒷받침되고 있지 못한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는 그들을 근대화의 길로, 나아가 고도성장의 길로 이끈, 앞으로도 상당 기간 그러할, 지경학적 조건으로서 인접국 일본과 비생산적인 분쟁을 일삼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미 20년을 경과한 양국 간의 역사 문제를 둘러싼 외교적 분쟁은 이 나라의 지식인 사회가 자신의 역사적 정체성을 객관적으로 이해함에 있어서 커다란 결함을 안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근래에 생산된, 경제체제와 사회·문화의 비교적 특질에 관한 몇 편의 우수한 논문들은 공통으로 한국이 멕시코, 터키, 그리스, 슬로바키아, 폴란드, 이탈리아, 헝가리 등과 동질의 국가군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들 나라가 OECD 회원국으로 초대된 것은 국제경제의 환경, 곧 비교지경학적우위에 의해서이다. 이들은 대부분 주변부 국가들이다. 지난 세대의 경제적 성공에 도취해 있는 한국인들에겐 미안한 이야기지만, 한국 역시 주변부 국가이기는 마찬가지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151-74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전화: (02) 880-6368

팩스: (02) 886-4231

E-mail: yhrhee@snu.ac.kr

